

노동자운동연구소

# Issue Paper

## 노르웨이 테러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인종주의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와 유타야 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총기난사로 인해 68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여파는 멀리 있는 한국에까지 미쳤다. 테러사건의 인종주의적, 반이슬람주의적 요인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 이민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한국의 외국인혐오주의 집단을 고무했다. 한국이 이주민을 계속 유입하고 다문화정책을 지속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다문화정책반대 카페를 비롯한 유사한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 테러사건의 원인과 한국에 던진 교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주장은 인종주의를 단순히 소수 이주민 집단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및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관된 억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08.26

임월산 국제국장

limwolsan@gmail.com

## I. 노르웨이 테러사건

### 1) 경과

- 7 월 22 일, 16 시 반, 오슬로 총리공사 인근에 폭탄 폭발로 8 명 사망.
- 2 시간 뒤, 집권당인 노동당의 청소년지부(AUF) 행사가 열린 유타야 섬에서 한 시간 동안의 총기난사로 68 명 사망. 사망자 대부분은 16 살 ~ 18 살 사이 청소년.
- 총기난사 이후 가해자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Anders Behring Breivik, 32 살)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전화함. 그러나 경찰은 1 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유타야 섬에 도착. 브레이비크는 저항 없이 연행됨.
- 그는 테러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잔혹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말함.
- 연루된 극우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음.
- 브레이비크는 독방에 감금. 재판은 내년에 열릴 예정.
- 7 월 25 일 심리에서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을 무슬림 탈취로부터 방어하고자 한 것이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무죄를 주장.
- 8 월 12 일 노르웨이 정부는 경찰의 대응지연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임명.

### 2) 브레이비크의 목표와 유럽 우익세력의 반응

- 브레이비크는 1518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쓰면서 이슬람과 다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문화마크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가 유럽문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유럽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서유럽국의 정부와 군대를 장악해 서 보수적 문화와 정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브레이비크는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테러의 대상은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총리를 비롯한 집권당이였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서 예측한 전쟁을 테러범행을 통해서 촉발시키고자 했다. 전쟁의 우선적인 대상은 이슬람보다 다문화를 표방하는 사민주의, 자유주의 세력이였다.
- 유럽 우익정당은 이번 테러사건이 다문화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그 예로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우익 정당 내에서 다문화정책이 테러를 부른다고 주장한 당원이 규탄 당했고, 프랑스 국민 전선당에서는 브레이비크를 찬사한 당원을 제명했다.
-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총리가 "열린사회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하며 국가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다문화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 3)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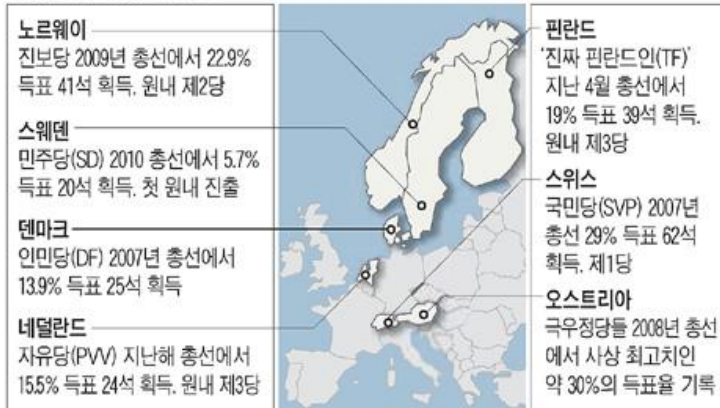
#### 1. 노르웨이 이민과 이민정책 현황

- 노르웨이의 이민정책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슷하다. 미등록이주를 막기 위해 국경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원칙적으로 들어온 이민자에게 평등한 기회, 복지혜택 등을 제공한다. 노르웨이의 난민인정 기준은 다른 유럽국가 보다 느슨하다.
- 노르웨이는 1945년까지는 타국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도적인 차원으로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 이민자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다. 1950 년 후반에 북유럽 국가 간의 이주통제가 폐지됐는데 노르웨이에 들어오는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은 문화적으로 비슷해서 동종성이 유지됐다.
- 1960 년대에 노르웨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력난이 생겼다. 단기적인 체류를 전제로 모로코, 유고슬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예측과 달리 정착했다. 난민신청과 가족 재통합(이민한 사람의 가족이 이민비자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을 통해서 이민이 계속 이루어졌다.
- 1975 년에 노르웨이 정부가 노동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이주민들이 다른 방법(난민신청 등)으로 계속 들어왔다. 1980 년대에 노르웨이가 경기침체에 빠지자 국민 일부는 이민을 통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반이민자 입장을 표방하는 우익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며 강제추방 절차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민자는 가족 재통합, 난민신청 등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다. 전체 인구가 480 만 명인 노르웨이는 1995 년 ~ 2000 년 사이에 매년 약 4 만 명의 이민자를 받게 됐다.
- 현재 노르웨이의 외국 태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2%이다. 외국인 태생 주민의 자녀까지 가산하면 약 15%이다. 비유럽 출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제 3 세계 출신 5%, 동유럽 2%)이다. 특히 도시에서 수자가 많고, 모여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띈다. 오슬로의 전체 인구에서 비유럽의 비율이 17%이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이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 1980 년대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동화가 아니라 사회편입이라는 원칙을 준수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언어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노르웨이 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만 요청하는 의미다.
- 그러나 사회적 차별,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언어적 어려움이나 피부색, 종교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다. 실업률이 내국인 보다 더 높으며 주로 내국인이 피하는 저임금, 위험한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 노르웨이어에 능숙한 이민자 2 세들의 22%가 배경 때문에 집을 빌리거나 살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교에 유색인 이민자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백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학교로 보낸다.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또는 배제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국가복지체제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라도 받아들이게 만든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2. 유럽의 외국인혐오주의

-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민주의(포퓰리즘) 우익 정당들이 이주민, 특히 무슬림에 대한 불만을 활용해 영향을 강화했다. 반이민자나 반다문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방한다.

유럽 극우정당 지도도



- 극우 정당뿐 아니라 집권 보수세력들도 반이민자 정서를 활용한다. 최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한 적이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특히 표적이된다. 요즘 많은 유럽 국가는 반이슬람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스위스에서는 모스크 첨탑 건설을 금지했고 프랑스와 벨기 등은 이슬람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실시했다.

-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의 우익 인민주의 진보당(원내 제 2 당)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으며 신(新)나치 인터넷그룹 회원이다.

- 노르웨이 나치주의는 제 2 차 세계대전 시기 1940 년 나치의 노르웨이 침략, 점령(1940 년 4 월 ~ 1945 년 5 월)으로 시작했다. 노르웨이를 통치하도록 현지 나치정당을 키웠는데 그 때부터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에서 소수 나치집단이 존재했다. 1980 년대 복지체계가 축소되면서 나치세력이 강화되고 반이민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방했다. 1990 년대에는 스킨헤드단체 중심으로 신나치주의운동이 본격화됐다. 2002 년 스킨헤드단체인 부츠보이 회원이 노르웨이-가나인 청소년을 살해하는 사건 발생했다. 그 때부터 노르웨이에서 신나치주의가 사회적이슈가 됐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 유럽의 반이민자 입장과 반이슬람 정책은 2 가지 측면으로 이해한다. 1)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 타인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기는 하다. 2) 그러나 보수정당과 극우익세력들이 국민의 증오와 일반적인 불만을 확대시켜 지지를 얻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반이민자 입장과 정책은 죄파세력과 사민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봐야 한다.

- 일부 국제 언론은 노르웨이 테러사건을 정신이 이상한 한 명의 개인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유럽 정부와 사회가 극우 반이민자 정당과 조직을 용인한 것과 정치인들의 반다문화 발언과 반이슬람 정책들이 노르웨이 테러사건을 발생시킨 환경을 제공했다.

## II. 브레이비크의 한국에 대한 언급과 한국의 인종주의 단체

### 1) 브레이비크와 선언

- 브레이비크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2083 템플 기사단 [Knight Templar 2083])과 1518 쪽 문서(2083 유럽 독립 선언 [2083: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 한국을 60 번 이상 언급했다. 이 문구 일부는 아래와 같다.

- “가부장제 회복이 서유럽의 대안이며 일본이나 한국 모델이 해결책”
- “한국과 일본은 유럽이 1950 년대에 가졌던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원칙들을 잘 대표하고 있다. 과학적·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또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간과 살인의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사회”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단일화된 국가 중 하나. 일본,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 “대부분의 한국인이 국적을 피와 역사를 공유한 단일 인종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은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를 이상하게 여긴다.”

- 한국의 보수적 문화, 가부장제, 동일민족, 혈통주의를 유럽이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찬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혐오주의 집단을 고무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 2) 한국 외국인혐오주의 단체의 반응

- 최근에 만들어진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나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와 같은 인종주의 모임들이 테러사건과 브레이비크의 한국에 대한 언급에 고무되어 인터넷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모임들이 가시화됐지만 사실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수천 명 정도) 인터넷 카페 운영, 온라인 토론 외에 활동은 많지 않다.

- 아직은 소수이지만 최근에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0 년 10 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슬람 국가를 노동 송출 국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을 1500 개 이상 올려 게시판을 마비시킨 온라인 행동, 2011 년 6 월, 다문화를 미화했다며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서 집단 시위, 다문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항의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주노조 집회를 감시한 경우도 있다.

- 노르웨이 테러사건 직후에 다문화정책반대 카페 회원들이 아래와 같은 글을 카페에 올렸다.

- “저분(브레이비크) 너무 불쌍하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 “한국도 다문화, 다문화 하다가 저 꼴 난다, 어느 날 한국인이 기관총과 수류탄을 들고 200 명 사살(할 수 있다).”
- “(브레이비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에서도 다문화를 추구했던 당들에 대한 응징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 외국인노동대책시민연대 회원들도 “노르웨이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다,” “노르웨이식 다문화주의와 이에 기인한 무차별적인 회교도 유입 현상에 대해 잔혹한 테러를 불사할 정도로 반감을 가진 유럽 국민이 늘고 있다”라면서 사이트를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 또한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관계자가 CBS 와 인터뷰를 하면서 “서구에서 이미 다문화... 다인종 이민정책을 실시해서 이미... 어제 일어났던 노르웨이 폭탄테러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검증이 다 마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문화 정책을 유입함으로써 외국인 범죄 피해, 일자리 감소”가 심해지고 있다며 “10 년도 안 걸려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 무슬림이 사는 데는 폭탄테러가 안 일어나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앵커가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무슬림이 아니라 백인 내국인에 의한 테러”였다고 얘기하자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으로 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하는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외국인들의 의해서 그러한 폭탄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주류 언론에서 외국인혐오주의 모임 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발표됐다. 일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고치고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입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다문화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무자비한 이주민 유입을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위 내용 만큼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외국인혐오의 뉘앙스를 가진 입장도 있었다.

-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다문화 때문에 일어났다는 입장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담론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강화시키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토양을 제공했다. 이러한 토양을 체계적 인종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소수 외국인혐오주의 모임은 인종주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인종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단체들 몇 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억압체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III. 체계적 인종주의의 이해

#### 1) 인종의 정의

- 미국 인종 이론가 마이클 오미(Michael Omi)와 하워드 위넛트(Howard Winant)는 다음과 같이 인종을 정의한다. “인간 신체의 각기 다른 형태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이해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개념” (Omi & Winant, 1994 년, 55).

- 이 정의는 인종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종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적 명명이 본질적인 특성이나 물리적 성격을 언급하지만 사실 각기 다른 인종적 집단을 나누는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종적 범주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변화는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의 변화에 따른다.

그 예로 '아시안'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아시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집단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나라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시안'이라는 명명은 이러한 사람들을 토박이 한국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고 열등한 이들, 비난과 동정, 자선과 교육의 대상으로 만든다. (예컨대 부모 한 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쪽이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출신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부르기 위해 사용되는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아시안'은 "예컨대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군도, 태국,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극동,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대륙의 원주민들에 출신을 갖는 사람"으로 언급된다.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아시안' 만들기는 두 나라의 상이한 경제, 사회, 정책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 인종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단지 환상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와 정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제도와 정체성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 인종을 사회적 실천을 만들어내고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식 또는 이데올로기의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국가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이르는 사회적 실천에 내재된 상식으로서 인종은 '사회 구조의 요소'가 된다.

- 오미와 위넛트의 정의는 또한 인종의 개념이 처음부터 갈등과 위계를 내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종적 범주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특정 세력이 경제, 문화, 정치적 지배를 세우고 특정한 축적체제가 유지되는 헤게모니 진행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종적 차이라는 개념에는 항상 열등성과 우월성이 내포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박혀 있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을 나눈 것은 예초부터 다르지만 평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가 위에 있고 후자가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인종 불평등을 위해 의식적으로 날조된 *정당화*보다 그에 대한 반(半)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자연화*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발리바르는 식민시대 이후, 민권운동 이후의 세계에서 인종주의는 대개 공공연한 생물학적 범주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과학적인 인종의 개념과 문화나 전통의 차이가 혼합되어 편견 또는 차별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아시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이 생물학적 차이인지, 문화적 차이인지, 역사적 차이인지 구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 2) 인종주의의 정의

- '인종주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개인적 편견을 넘어선다. 오미와 위네프의 분석을 재정립하면 '인종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인종주의는 개인적 편견, 이데올로기, 표상, 법률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인종적 범주에 기반 한 억압체계." 여기에서 편견은 예를 들어 '인도사람은 냄새난다.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개인의 왜곡된 생각과 선택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보다 구체화된 사상을 의미한다. 인종주의단체의 외국인혐오 담론과 논리를 예로 들 수 있다. 표상은 사회적 통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 텔레비전, 영화, 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인종화된 집단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법률이나 정책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인종화된 집단을 나누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정책 차원으로는 사회 기관(학교, 병원, 정부부서 등)이 실시하는 정책, 규율을 포함할 수 있다.

- 체계적 인종주의란 위에 나열한 요소들 별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하고 서로 강화하면서 만든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체계적 인종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위에 열거된 모든 요소들이 역할하지만 자본의 차별적 착취, 지배담론, 국가 정책과 법률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 3)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연관성

- 체계적 인종주의는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국계 미국인 학자인 리사 로우(Lisa Lowe)가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그 지구적 확장의 전체 역사는 [인종적, 성적 등] 차이의 구조화를 통해 조직되었다... 자본 축적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차별화를 통해 지속된다" (Lowe, 199, 159).

- 인종주의적 요소들의 오랜 상호작용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집단의 헤게모니를 동시에 지원하고 자연화하며 자원, 기회와 권력에 있어 불평등을 만든다. 역사적으로 인종주의는 자본 축적의 기반이 된 노예제도(노예사회), 식민주의와 동시에 발생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 식민지에서 17 시계 말 전까지 식민지에 사는 소주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리 또는 차별이 없었다. 노예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계약 머슴으로 존재하기도 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자유민으로 존재하기도 했다. 17 세기 말에 백인 계약 머슴의 노동력이 비싸지면서 식민지 개척자들은 노동력 비용을 삭감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아프리카 노예들을 대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흑인들의 지위를 '평생의 노예'로 정의하고 백인을 '자유민'으로 명명하며 두 그룹 사이에 사회적 장벽을 세우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러한 법률들이 만들어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노예의 비용이 계약 머슴의 비용을 앞지르면서 발전한 새로운 노동관계를 규율할 법적 구조에 대한 필요성이다. 두 번째는 단결된 다인종 하위계급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다. 백인과 흑인의 명확한 위계적 차별은 빈곤한 백인의 충성심을 보장했고 식민지의 지배계급을 위한 노예화된 노동력을 더욱 쉽게 통제하게 만들었다. 별개의 인종과 백인의 우월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식민개척자들이 '노예 법률'을 제정하고 스스로와 서로에게 설명하면서 발전했다. 동시에 남부의 노예노동과 대서양 연안의 노예무역은 마르크스가 분명히 인식하였듯이, 아메리카 북동부와 유럽에서 섬유, 조선, 기타 새로운 자본주의



기업에 투자되는 부를 창출했다 (마르크스, 1976, 915). 결국 인종과 인종적 지배의 출현이 근본적으로 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과 뒤얽혀 있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 지난 30 년 동안 신자본주의 세계화는 농촌 지역 안팎과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불평등이 일반적으로 인종적 구분선과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인종적 범주와 인종주의적 사회구조와 함께 발생한 세계 각 지역의 자본주의로의 불균등한 편입에서부터 일어난다.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평등을 본질적 특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불균등성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즉 그들의 빈곤은 인종화된 (남반구의)노동자 자체의 특징인 세련된 부족, 무기력함, 기술 부족, 열등한 문화, 성차별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 오늘날 인종주의는 이민과 외국인 노동력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통해 작동한다. 한국을 비롯해 모든 이주 유입국에서 남반구 이주민들이 비정규, 저임금, 위험한 일자리를 위한 일차적인 고용대상이다. 그 이유는 본국의 비참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내국인 노동자들이 거부하는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엄격한 이민정책과 외국인노동 정책은 다른 형태의 고용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실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민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종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그들이 직면하는 기준 이하의 노동조건과 권리 부재에 대해 대중이 별로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다.

#### IV. 한국사회에서의 인종주의의 핵심 표현

##### 1) 차별적 이민·외국인력 정책

- (아시아)외국인, 동포, 내국인을 구별하는 이민·외국인력 정책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체계를 형성하는 핵심 축이다. 이민·외국인력과 같은 특정한 개인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정의함으로써 권리, 부, 기회의 불평등을 자연화한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는 범주는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인종적 범주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은 개인적 편견, 언론 표상, 인종주의적 지배담론으로 인종화 된다.

- 외국인으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권리가 금지되어 있다. 장기체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정치적 권리도 부정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속박된' 노동으로 만들어 고용주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장벽을 설치할 주권이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결국 국민이 아닌 이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상적 민족국가 개념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어떻게 서로 강화하는 지를 발견할 수 있다.

-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민정책에서 생물학적인 인종범주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역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이는 생물학적이고 민족적 동일성에 근거해 해외의 한국인들을 다른 이주민과 구별하는 것이다. '동포'로 명명된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훨씬 큰 자유가 있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크다. 또한 노동할 산업 선택 범위도 더 넓다. 저발전 나라들에서 온 동포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 온 이들과 같은 권리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 용어의 실용적 적용을 보여준다. 인종적/민족주의적 용어인 동포의 사용과 이에 기반한 정책은 한국인(그리고 미국과 일본 출신의 해외 한국인)이 최상위에 있고 저발전 국가 출신의 해외 한국인이 중간에 있고 '비동포' 이주민이 바닥에 있는 권리와 사회적 지위의 위계구조를 만든다.

## 2) 범죄화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란 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상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혐오 단체들이 외국인범죄를 자주 주목하고 비판하는데 이 관심은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공식적 설명과 언론 보도가 만든 환경 속에서 고무된다.

- 2008 년 9 월 25 일에 한국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출한 '미숙련 외국인력 정책개선 방안'에서 범죄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불법체류의 문제점으로 "불법 외국인 체류 집중지역의 증가", 모든 형태의 범죄 발생, "국가이미지 훼손" "불법체류자에 의한 노조결성 [이주노조], 법 무시 풍조[조장]"로 나열한다. 범죄화의 경향은 경찰이 자주 실시하는 '외국인 범죄' 단속 기간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조치들을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는 범죄성을 '외국인'의 특성으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 외국인범죄 단속에서 한국인이면 고발의 대상되지 않을 도박이나 최근의 베트남 건설노동자의 단기간 자별적 파업 등은 연행, 고발, 추방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시아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미등록 이주민을 사실상의 범죄자로 표현하고 그렇게 취급한다. 이는 주류 미디어 보도에 반영되는 형태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성과 연관짓는 것은 국경통제, 단속, 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자연화하고 이에 의해 재 강화된다.

## 3) 표적단속

- 이주노조를 비롯한 이주민 조직 지도부에 대한 표적 단속도 체계적 인종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표적단속은 몇몇 개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타격이다. 이주민 단체 지도부를 없애는 것은 대다수의 일반 이주노동자에게 겁을 줘서, 억압받는 세력이 실질적 불평등과 대표의 부재를 상쇄할 수 있는 일차적 수단인 집단행동을 제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이 인종적 계급적 위계구조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4) '다문화적' 은인·수혜자 관계

- TV 광고나 영화, 정부 다문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전반에서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은 흔히 저개발 국가에서 온 가난한 존재로서 표상되고 도움과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는 이주민을 묘사하는 방법이라기보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나 한국사회라는 존재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 정부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미지화하는 것과 연관된다. 우리는 발전했으며 관대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세련됨을 갖추고 있다는 선언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구속하는 착취자가 아니라 불쌍한 외국인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범죄화와 은인·수혜자 관계는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을 발전된 나라로 개조하는 목표에 복무한다. 전자는 이주노동자를 값싸고 착취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노동력으로 만들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것을 돕는다. 후자는 이러한 착취를 대중적 시야와 개인적 의식으로부터 가린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노동자 범죄자화와 '다문화적' 자비를 같은 인종주의적 체계의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 다문화주의는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공존(동화가 아니라 사회 편입)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종종 무슬림 커뮤니티의 자치적 문화, 종교, 관행을 유지하는 것과 혼합된다. 한국의 외국인혐오 모임들 같은 경우 다문화와 이민사회를 혼합해서 정부의 동화정책, 이주민 지원정책을 다문화정책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인 한 한명과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온 사람 한 명으로 이룬 가족과 그의 자녀를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 VI. 결론: 반인종주의 투쟁 건설하자

결론적으로 노르웨이가 이민사회 때문에 테러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주를 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외국인혐오 단체의 주장을 확고하게 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오는 이주를 막을 이유가 없고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다. 이주민은 신자유주의와 군사적 세계화로 인해 생긴 본국의 사회불안, 실업,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한국의 인력난과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대책으로 유입된다.

결국 노르웨이와 비슷한 비극적 참사를 방지하려면 인종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는 테러나 극우단체와의 싸움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인종주의와의 싸움이어야 한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 인종주의적 정책, 인종주의적 표상들을 체계적 인종주의의 요소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인종주의적 사회위계를 강화시키는 불평등(언어, 사회적 자본, 정치적 권리, 교육권 등)을 인식하고 운동 내 인종주의적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인권, 노동권을 주장하는 운동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의 주체화, 세력화 없이 인종주의체계를 바꿀 수 없다. 다양한 형식의 조직화, 지도력 강화가 현재 이주운동의 핵심 과제다.

내국인과 외국인(외국인, 동포, 내국인)을 차별하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은 반인종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과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할 권리, 정치적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영역(언론 표상, 교육기관, 노동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도전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참고자료

Balibar, Etienne. 1991, "The Nation Form: History and Ideology,"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Verso. [국역: 서관모 역, 「민족형태: 그 역사와 이데올로기」, 『이론』6 호, 1993]

Bonacich, Edna. and Wilson, Jake. 2008, Getting the Goods: Ports, Labor and the Logistics Revolu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Cooper, Betsy. 2005, "Norway: Migrant Quality, Not Quantity." Migration Policy Institute.

Feffer, John. 2011, "Norway: The Enemy Withi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Lowe, Lisa. 1996, Immigrant Acts: On Asian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Marx, Karl. 1976, Capital, Vol. I. Ben Fowkes, trans. Penguin Books.

Omi, Michael. and Winant, Howard. 1995,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2nd Ed. Routledge.

박노자. 2011, "북유럽의 이민자 사회: 이상과 현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초청강연.